환경정책 일관성을 바라며

수도권 부회장 이귀향

환경사적 많은 업적을 남긴 2001년을 되돌아보면 환경산업의 희망이 보여 환경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뿌듯하다. 지난해 환경 R&D 500억원, 올해는 7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니 이제는 희망을 이야기해도 될 듯 싶다.

정부에서 환경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만성환경분야 미취업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관리인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는 환경정책에 분노한다.

첫째, 지도 · 단속업무 등 환경관리업무의 지방위임화 문제 등으로 업무 혼선초래를 들 수 있겠다.

과거부터 환경관리행정업무가 지자체에서 환경청, 환경청에서 지자체로 이양되는 것을 번복하더니 올 7월부터는 다시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다고 한다.

현재 구청, 시청, 도청, 환경청, 환경부, 경찰청, 검찰청, 감사원 등에서 지도 ·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단속에 그치고 있어 사전오염예방 차원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위해서 관계당국에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예방차원의 제대로 된 기술지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배출부과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내용을 들여다보자.

연구용역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으나 직접 관련된 사업장 관계자나 현장실무자를 제외하고 실시된 공청회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배출업체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을 교수와 연구원들이 앞장서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인 타당성 여부와 사후 예방적 효과에 대한 기대효과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또 하나의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배출업소와 관련된 법의 공청회는 배출업소의 충분한 의견개진 후 배출업소와 상호협력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법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

셋째, 환경부에서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환경흠닥터제도'의 유명무실을 짚어보자.

모 연구기관의 용역으로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으나 미약하며, 지도·단속기관이 얼마만한 호응을 얻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 홈닥터제도는 지역협의회별 '환경기술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수년 째 이뤄오고 있는 연합회 차원에서의 큰 사업이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위한 기술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절실했다. 그동안의 노하우와 정부의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환경관리인들의 축적된 전문기술로 보다 빠르게 지역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 현장실무자들의 참여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합회의 생각을 관계당국은 간과해 버렸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환경홈닥터제도'가 유명무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와 더불어 환경기술정보센터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기대했던 효과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konetic이라는 사이버컨설팅은 실수요자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넷째, 환경평가사 시험제도를 들 수 있다.

지난해 9월 5일 환경평가사를 비롯 많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신설, 올해부터 시험이 실시될 예정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환경평가사만은 제외되었다. 노동부와 환경부의 이견 때문이라고는 하나 수험서까지 나오고 학원에서 강의를 실시한 곳도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보류되고 있다는 것은 수많은 환경인들을 무시한 것이다.

환경부 개별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나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으로 10만여명의 환경기술자와 환경공학도를 기만하여 혼란을 초래했다. 어떻게 정부를 믿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

다섯째, 연합회에서 '환경관리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자 관계당국에서는 환경공무원 비리수집으로 오해를 해 업무에 애로를 겪었다.

연합회 차원에서는 환경관리가 보다 청렴하고 신속·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너무 큰 오해를 불러온 것 같아 씁쓸하다. 이로 인해 기타 환경부문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환경관리인들은 안타깝기만 하다.

여섯째, 환경관리인 및 기술자 법정교육 보완을 들 수 있다.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법정교육이 현장 실무자에게 수없이 지적을 받으면서도 현실을 무시하고 교과서적, 이론적 교육을 예산낭비하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 교육 프로그램의 정형화, 변하지 않는 강사진, 현장중심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 외국 신기술 및 최신 기술교육이 너무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환경행정의 피해자는 결국 환경기술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일곱째, 동반자적 역할을 바란다.

목소리가 크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은 옹호하고 감싸주면서 오직 감시만을 받고 있는 환경관리인연합회의 의견은 묵살해 버리고 종속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권위의식은 더는 없었으면 한다.

모든 사업자의 기술자가 환경관리인들인데 아무런 기술적 협력을 하지 않고 모든 환경정책에서 배제시킨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오해일까?

배출업소 환경관리인들만을 위한 환경행정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좀더 일관성 있고,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 드린다.